
	<h1>보도자료</h1> <h2>배포시 보도가능</h2>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		
	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* 과제별 소관 연락처는 [붙임] 본문에 표기		
책 임 자	김성조 팀 장 (2156-8003)	담 당 자	박경덕 사무관 (2156-8004)
	이성원 팀 장 (3145-8855)		이재중 사무관 (2156-9697)
	홍영기 부국장 (3145-8202)		김종식 사무관 (2156-8005) 박석훈 사무관 (2156-8007)
			장항필 선 임 (3145-8856) 최은희 선 임 (3145-8635)
배 포 일	2016.2.5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보실(3145-5789~92) 총3대

## 제 목 : 현장점검반 11~12월중 (29~32주차) 건의사항 회신결과

## 1.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

- 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'16.1월까지 총 38주간 502개 금융회사를 방문 3,821건의 건의를 받음

< 1~38주차 접수현황(잠정) >

(단위: 건,%)

건의사항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현장답변	244	104	58	360	766(20%)
② 법령해석, 비조치	12	71	86	62	231(6%)
③ 관행·제도개선	292	1,023	807	702	2,824(74%)
합계	548	1,198	951	1,124	3,821(100%)

\* 2.1일 일괄회신한 295건의 비조치는 미포함

## 2. 29~32주차 (11.9~12.4)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

- 29~31주차 건의사항 306건은 ①현장 답변 61건, ②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13건 ③관행·제도개선 232건이며, 이중 관행·제도개선 건의 232건에 대한 회신 완료

- 회신한 관행·제도개선 과제 232건중 87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38% 수준  
[1~32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7%(2,586건 중 1,227건) 수준]

(단위: 건,%)


회신결과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수용	1	50	24	12	87(38%)
② 불수용	2	29	15	22	68(29%)
③ 추가 검토	2	42	23	10	77(33%)
합계	5	121	62	44	232(100%)

### 3. 29~32주차 (11.9~12.4)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<별첨참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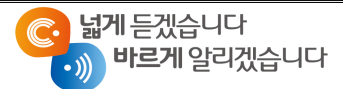
- ①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방식을 개선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
- ② 전자금융채널(인터넷·모바일)을 통한 보험료 납입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고객의 편의에 기여

※ 29~32주차 관행·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 (<http://better.fsc.go.kr>)에 공개



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**별첨**      **주요 수용사례**

▶ **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폐지**

☎ 금융위 은행과 송현지 사무관 (2156-9813)

- ☐ **(기존)**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개설시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라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자에게 확인서 징구

※ 「금융실명법」(제3조 제6항)은 금융회사가 불법차명거래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(3천만원 이하) 가능

- ☐ **(문제점)** 신규 계좌개설\*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·징구·보관 하여야 하여 거래자 및 금융회사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 초래

\* 국민, 우리, 신한, KEB하나 등 4개 시중 은행의 경우 879만건 ('15년 기준)

- ☐ **(개선)** 별도 확인서 징구를 하지 않고, 다른 방법\*을 통해 불법차명거래 금지 관련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(유권해석)

\* ①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식상 '불법차명거래금지'를 설명하는 문구 포함  
 ② 금융회사 내규상 신규 계좌개설시 불법차명거래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

▶ **전자금융채널(인터넷·모바일)을 통한 보험료 납입 절차 간소화**

☎ 금융위 전자금융과 서병윤 사무관 (2156-9494)

- ☐ **(문제점)**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안매체를 이용해야 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

- 고객 본인명의 계좌에서 보험회사 지정계좌로 이체함에 따라 자금 이체 관련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으며,\*

\*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로 입금계좌도 지정

-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전국 단위의 고객창구가 부족하여 보안매체 발급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

- ☐ **(개선내역)**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\*되어 있다면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선(유권해석)

\*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: 등록금,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 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안매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